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 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5. 12. 10. (총 2 쪽)

보 도 자 료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많아
- 여당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권한 확대 법안에 불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오늘(12/10)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웍스 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2.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3.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4.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 아 래 -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